

#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계층이동과 빈곤

The Social Mobility and Poverty in Korea since 2000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7월 25일

## 1. 들어가며

지금 한국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것이 1997년 경제위기(또는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긴 터널의 끝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터널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 속에 지난 20년 간 누적된 불공정과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적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정치공간을 통해서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지위가 교육투자의 차별화를 통해 그리고 부의 상속을 통해 자녀세대의 계층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던 문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논증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이 함축하는 바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기존 경제사회시스템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실험으로, 기업들의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외환위기를 시발점으로 실업률과 빈곤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초기국면을 거쳐, 고용불안이 확산되며 빈곤율이 증가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노동시장은 과거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이원화되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지위가 빠르게 하락하는 <하방형> 계층이동이 진행되었다. 노동시장이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당시의 부모세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자녀세대의 계층지위를 유지하거나 상향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자녀들의 높은 대학진학률로 이어졌고, 부모세대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득불안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모세대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현재의 청년세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취업이후에도 계층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결과는 단순히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만으로 자녀의 계층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며, 부모의 계층지위와 직업위세가 자녀들의 계층상승이나 유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부모의 직업과 소득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학력 청년세대의 실업과 고용불안 그리고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난 20년간 각 정부가 표방하였던 정책방향은 그 이념적 지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내세우는 공약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개별가구의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그럼에도 빈곤과 박탈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층과 직업의 세습 그리고 빈곤문제는 개선되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경제사회적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교육-노동-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대안적 패러다임의 부재 속에서 지엽적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 글은 계층이동의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집단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른바 계층세습이라 불리는 일련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경로와 원인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과 향후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 II. 이론적 검토

### 1. 계급과 계층, 그리고 새로운 취약계층

계급 개념은 사회집단의 미시적 특징을 포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포착하고 설명하기에는 큰 강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집단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여전히 계층 개념이다. 그것은 현실 사회집단의 복잡한 구성과 특징을 포착하는 분석적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시스템과 사회집단에 대한 계층적 접근방법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으로 분류한 뒤, 각

소득계층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및 종사상지위의 구성 등을 파악하고, 그 규모와 추이 그리고 증감 원인을 분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적용한 계층 개념은 다양한 집단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사한 소득수준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하위집단은 다양한 세대와 직업 그리고 교육수준을 갖고 있다. 평균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이해관계나 하나의 태도를 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무한히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공통인자를 찾는 방식이 불가피하다. 가구단위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집단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가구주와 가구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지위 그리고 각종 가치의식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계층분류 방식은 가구를 구성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의 가치와 이해관계는 소득지위 외에도 세대나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더라도, 세대나 성별 그리고 생애주기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하는 접근방식은 분석적 용이성 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실에서 소득계층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이나 빈곤층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은 나름의 존재이유가 있는 셈이다.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은 더 많은 시민이 평균적 생활수준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가 사회결속과 정치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층의 증가 문제에 주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위험요인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이나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들은 어떤 집단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 표적화(targeting)에 어려움이 있다. 각 소득계층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중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포착할 수 있는 보완적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같은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 또한 그 특성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득계층 개념은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계층을 포착할 수 있는 다른 개념 또는 다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논쟁과정에 있는 하지만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취약계층)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9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취약집단(précaires)이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으며, 그 중 일부가 후기산업사회의 프로레타리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프레카리아트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 개념은 이후 프랑스 사회정책에서 실업자와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리고 이 개념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기집단이 처하고 있는 제반 상황을 표현

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에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되살린 스탠딩 또한 이러한 효용에 주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개념은 특정 사회경제집단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미 존재하는 계급(class-for-itself)이라기보다 <생성과정에 있는 계급>(class-in-the-making)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전히 계급 개념을 연상시키는 현실과 기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변화된 현실에 존재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Standing, 2011: 7).

한국사회에서 프레카리아트, 즉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위기집단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데도 유용하다. 현재 많은 국가의 사회보험제도가 이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고용관계를 특정하기 힘든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보호하기 힘든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새로운 노동자들,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데 제약이 많은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기 힘든 노인빈곤층,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실업 상태에 빠진 청년 등이 그들이다. 이것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 등 대안적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일 것이다(서희원, 2016: 539-549).

## 2. 계층이동과 계층지위의 대물림

계층 연구의 오랜 관심사는 계층지위의 대물림 문제이다. 이는 상위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그 소득지위 및 직업지위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와 상속 등을 통해 대물림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계층지위가 대물림되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각 개인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건에 의해 삶이 결정되게 되는 경우 사회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확인되어 왔던 일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사실 계층이동성의 둔화와 계층지위의 세습현상은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시스템의 경직성과 노동시장의 분절성, 인종과 종교, 학벌주의 등의 연고주의 그리고 소득불평 등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분석적 관점에서, 계층이동이란 특정 기간에 발생한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 또는 종사상 지위의 세대 내(within generations) 또는 세대 간(between generations)의 변화를 지칭한다. 여기서 말하는 계층이란 소득, 직업, 인종, 민족, 건강상태, 교육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집단을 지칭한다. 참고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계층

개념이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계층이동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동의 형태로는 상향이동(upward mobility)과 하향이동(downward mobility)의 양방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직적 이동(vertical mobil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직적 이동에 대비되는 것으로 동등한 사회적 지위로의 이동을 뜻하는 수평적 이동(horizontal mobility) 또한 존재한다. 계층이동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세대 내 이동(intra-generational mobility)과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이 존재하고 있다. 전자가 한 개인의 생애주기 내에서의 계층지위 변화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부모와 자식처럼 다른 두 개인 또는 세대 간의 계층지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계층지위의 대물림 또는 세습의 형태를 분석할 때 사용된다. 계층이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절대적 이동(absolute mobility)과 상대적 이동(relative mobility)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가 생활수준의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득의 변화액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 지위, 즉 소득분위나 소득계층의 변화를 제시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계층이동(social mobility)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계층의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이 공존함으로써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계층지위가 대물림하는 형태로 변질되는 경우이다. 만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이미 주어진 조건에 의해 소득지위나 직업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차라리 신분제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세대의 계층지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녀의 계층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로가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직업지위를 이용한 취업지원, 재산의 상속 등이다. 좋은 학력이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으로 진입하는 가장 큰 조건인 사회에서, 좋은 학력을 얻기 위한 사교육비 투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소득층 자녀는 설사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고,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취업이후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더라도, 부모세대의 계층지위는 재산상속 등의 형태로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사한 임금수준을 가진 젊은 세대라도 상속된 재산의 크기에 따라 삶의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계층 연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과거의 계층연구는 주로 횡단면자료를 활용한 동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즉, 빈곤층이 얼마나 증가했고 중산층이 얼마나 감소했으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득계층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대 간 계층이동을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개의 패널데이터가 구축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층 연구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일차적으로 한 집단의 생애 내 계층지위 변화에 대한 연구, 즉 <세대 내 계층이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반복적으로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집단의 빈곤진입 또는 빈곤탈출 확률이 높은지 분석되었다(노대명 외, 2007). 그리고 최근에는 패널데이터가 장기간 축적됨에 따라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부모세대의 소득지위나 직업지위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자녀의 소득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크기가 어떤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계층지위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 3. 한국의 계층이동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계층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빈곤층의 증가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당시 사회를 지탱하던 중산층의 약화 또는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주로 기업의 대량해고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과 무관하지 않으며, 시장개방과 맞물려 있는 탈산업화 경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는 서서히 침식되어가던 사적안전망(private safety net)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각 개인의 고용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적안전망이 약화되고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후 20년간 한국사회의 계층이동은 매우 거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진행된 계층이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계층 대물림의 심화로 모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흙수저와 금수저,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표현은 계층이동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한 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계층 대물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부모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및 불이익의 경험, 교육수준 등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모와 자신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했을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학력 인구집단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모세대의 계층지위를 유지하거나 그보다 계층상승을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병훈, 2017: 17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세대의 소득지위나 직업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주요한 경로는 교육이다. 김희삼은 소득불평등이 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탄력성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탄력성이란 부모의 소득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정도를 지칭하며, 소득지위와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소득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탄력성에 대한 비교연구결과는 불평등이 심할수록 소득탄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청년들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소득

지위에 비해 교육 자체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희삼, 2015). 그것은 교육의 양적확대가 부모의 소득지위에 의해 질적으로 다시 차별화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육이 계층지위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적으로도 차이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병영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교육이 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한다(박병영, 2008).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인식, 이경희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소득지위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매개로 소득지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1998년~2015년까지 총 18년에 걸친 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1960년~1975년생을 출생코호트1, 1976년~1996년생을 출생코호트2로 설정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지위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과거 세대보다 최근 세대(출생코호트 2)에서 더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민인식, 이경희, 2017).

계층지위의 대물림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결과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연아는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의 직업적 지위, 즉 비정규직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분절정도가 직업지위의 세습구조를 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양을 늘리기보다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김연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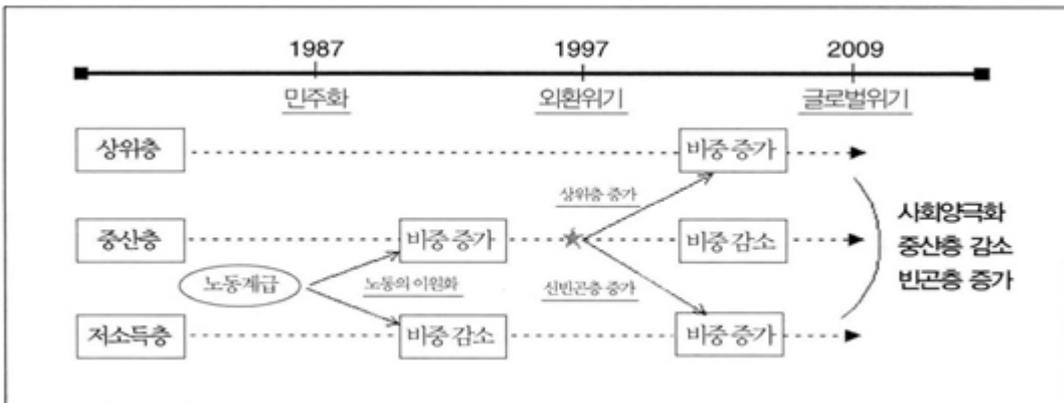
계층지위의 대물림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집단은 역시 현재의 청년집단이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을 중심으로 기회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왕원 등은 2000년대 이후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경험한 세대와 반복적 경제위기와 장기간의 저성장을 경험한 세대가 계층지위의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고도성장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세대 간 계층의 상향이동을 경험했던 산업화 세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해 계층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반면, 산업화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교육과 취업과정에서 계층상향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왕원 외, 2016). 이는 한국사회가 2000년대 이후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 III.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 1.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이 형성되고 분화되는 시점은 크게 두 개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이다. 이는 당시 노태우 정부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집단은 노조가 조직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문제는 이들의 임금 인상 폭은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낮았고, 이들이 장차 구조조정의 일차적 희생자이고, 사회보장제도 확장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의 다수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이다. 이 사건은 당시의 노동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이 시기에 많은 임금노동자가 실업을 경험하고 이후의 고용불안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의 중산층 중 상당수는 신빈곤층 또는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2003년 신용대란과 2009년 리먼쇼크의 충격으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는 임금노동자 외에도 전체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계층구조의 변화



자료: 노대명(2009) 45쪽에서 인용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1) 경기충격과 저성장의 위협, 2) 탈산업화의 노동시장의 불안정, 3)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이다.

먼저 2000년대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제가 바로 경기침체와 저성장이다. 9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던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 차례 심각한 경제충격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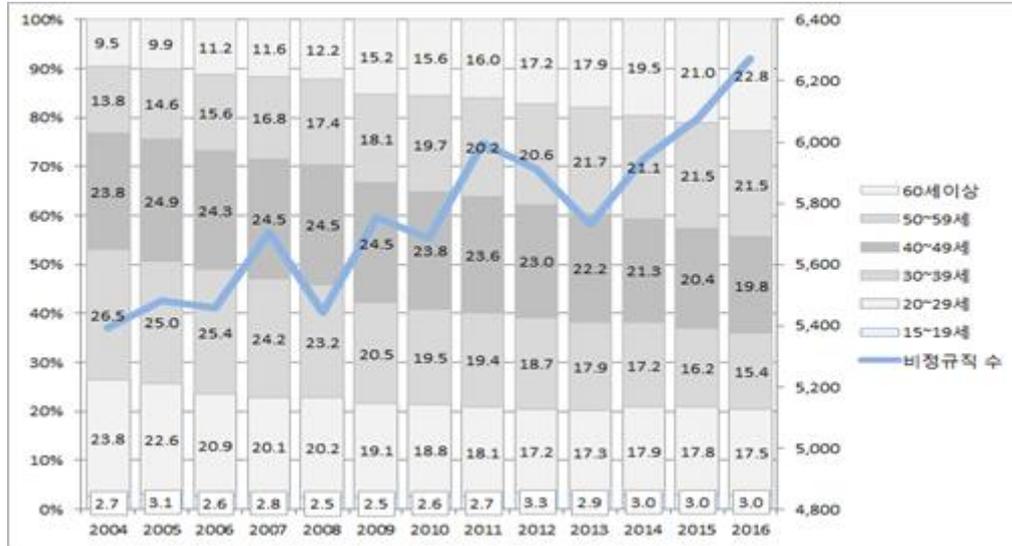
게 된다. 앞서 언급한 2003년의 신용대란이나 2009년의 리먼쇼크가 그것이다. 실제로 이 충격은 아래 그림의 GDP 증가율에 잘 드러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8%~10%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의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성장률의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저성장의 장기화를 단정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어 왔고, 앞으로 더 장기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계층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으로 탈산업화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탈산업화 이후 도래하는 서비스경제체제는 일부 국가처럼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지만, 상당수의 일자리는 저숙련 또는 반(半)숙련의 저임금 그리고 고용불안의 일자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품판매나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대인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과거 제조업부문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를 상쇄시킬 정도로 빠른 양적 성장을 하지만, 실제 서비스업종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성 또한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탈산업화는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들은 점진적 탈산업화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통해 시장이 개방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가 빠르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멸된 일자리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부문 일자리가 급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이동과 그에 따른 계층이동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이유를 말해준다.

계층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탈산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했던 다양한 정책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추이와 그것을 구성한 연령대의 분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선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의미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기간에 걸쳐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각 막대는 2004년~2016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각 연령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비정규직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 대부분이 50대에 직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취업이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주거비나 교육비 등의 높은 가계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집단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들이 현재 과도한 지출부담을 감수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나 에듀푸어(edu poor)로 생활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미래의 노인빈곤층이 될 위험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다만 아래 그림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청년취업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다. 그것은 아래 통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청년층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진입하는 연령 자체가 늦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집단, 즉 비학업, 미취업 집단(NEET)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전기청년집단의 경우에는 취업하더라도 그것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대졸자의 상당수가 1~2년 단위로 취업해 있음을 감

안하면, 이들의 고용불안은 매우 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전체 비정규직노동자 수 추이와 연령분포(2004~2016)



자료: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계층구조의 상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임금수준과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은 이들의 실질임금이 훨씬 낮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고용단절과 소득감소의 위험이 큰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주요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비교해 보면, 자료가 발표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서 80~90%수준까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여전히 30~40%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보전도 힘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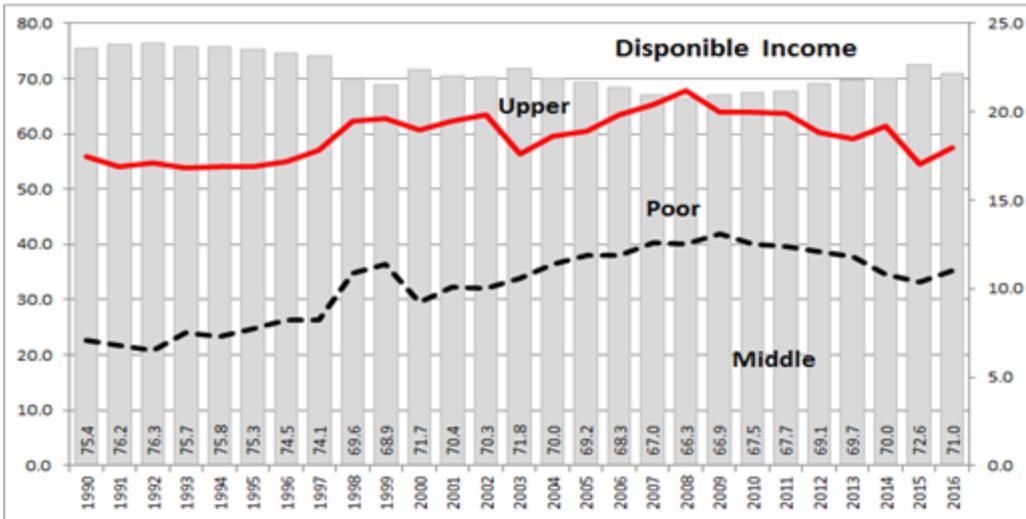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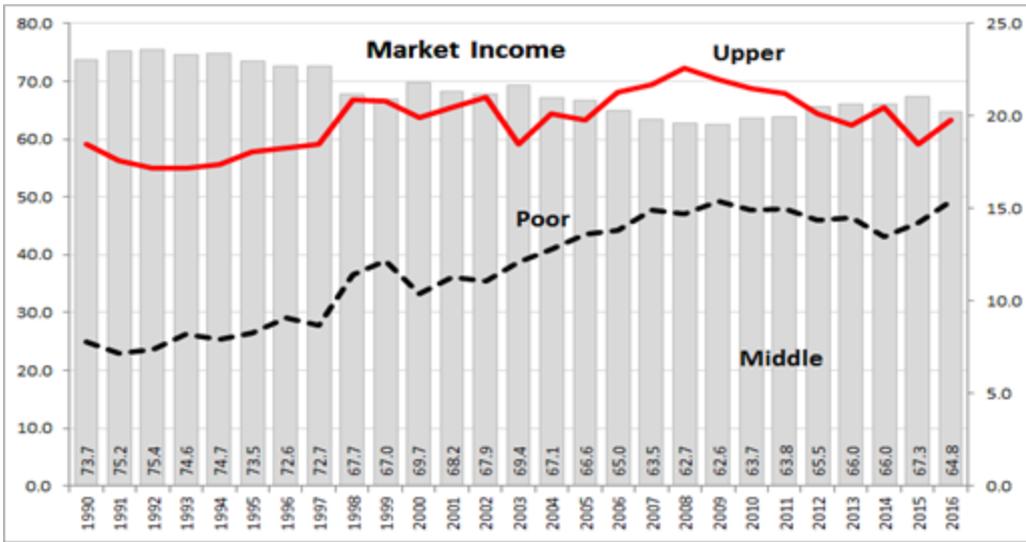
끝으로 계층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이다.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인구고령화 문제로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6년 노령인구가 아동인구를 초과하고, 근로연령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는 전환점에 들어섰으며, 2030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경제사회시스템의 재생산에 큰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계층구조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로 전체 소득계층 분포에서 노인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노인단독가구 외에도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

대적으로 사적안전망에서 분리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은 인구고령화로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부모세대에서 독립하는 청년 1인 가구 또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율 증가는 경제환경, 특히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동 외에도 인구가족구조가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 2. 계층구조의 변화와 빈곤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중산층-상위층>의 규모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한 계층구조 변화는 지금까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의 경우, 표본유지율에 따른 가중치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계층구조와 이동의 규모를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계층이동의 원인과 경로를 보여주기에는 유용하지만, 계층구조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활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림 3] 소득유형별 소득계층의 분포 추이(1990~2016)



주: 1) 분석대상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2) 소득계층 분류는 중위소득 50%이하 = 빈곤층, 50~150%=중산층, 150%이상=상위층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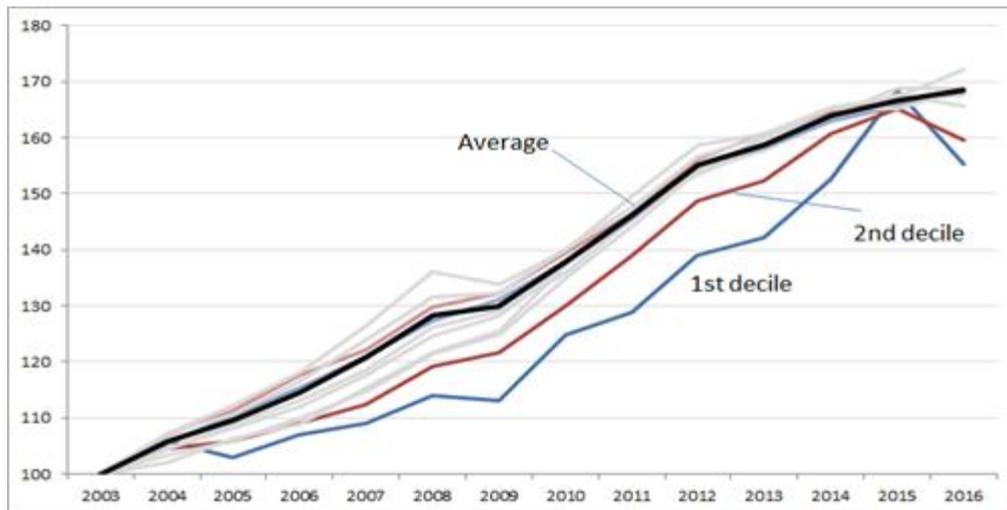
자료: KOSIS, 소득분배지표, 2017년

위의 그림은 두 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의 그림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아래 그림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시장에서 벌어들인 가구소득의 총액이 빈곤선(중위값의 50%기준)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대 중반이후 약 15%에 달했으며, 정부의 각종 공적이전소득(복지급여 등)을 받고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약 12%~13%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상위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로 상위층의 증가세를 완화

시키고 중산층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대 이후 빈곤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산층의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위의 계층구분이 빈곤선을 활용한 소득계층이었다면, 보다 세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10개의 균등집단으로 나누어 평균소득의 추이를 비교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계층에서 어느 시점에서 지위하락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2000년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그리고 중산층의 감소가 어느 집단의 증가를 통해 발생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전체 소득분위에서 하위 10%와 20% 집단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평균소득의 처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위 10% 집단의 평균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이 지속적으로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소득이 경상소득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급여가 지급된 이후임에도 이러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1/5은 잠재적 빈곤위험집단의 규모의 일부라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 그림에서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20%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집단이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을 하고 있으며, 특정시점에는 그 일부만이 포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취약계층 또는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소득분위별 경상소득의 추이(200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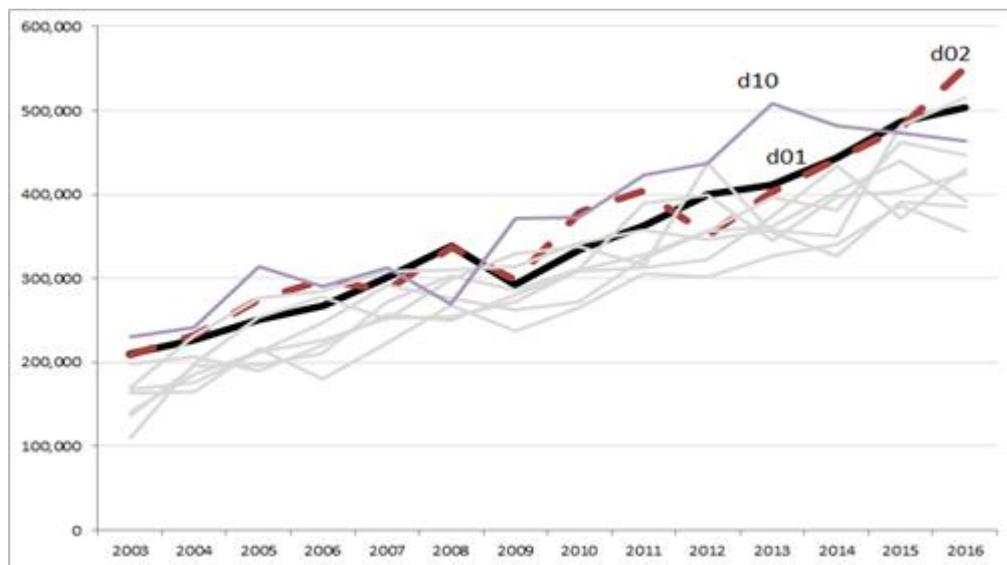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2인 이상 전체가구 대상 자료

2) 2003년의 각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 100

자료: KOSIS,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앞서 정부가 복지급여를 포함한 공적이전 이후에도 하위 20%의 평균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래 그림은 이와 관련해서 2003년~2016년 이전소득이 하위 20%집단에게 비교적 일관되게 투입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복지지출이 선별적 또는 잔여적 복지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하위소득계층에게 집중되어 왔던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최상위 10%에게 지급되는 이전소득은 주로 사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림 5] 소득분위별 이전소득의 추이(200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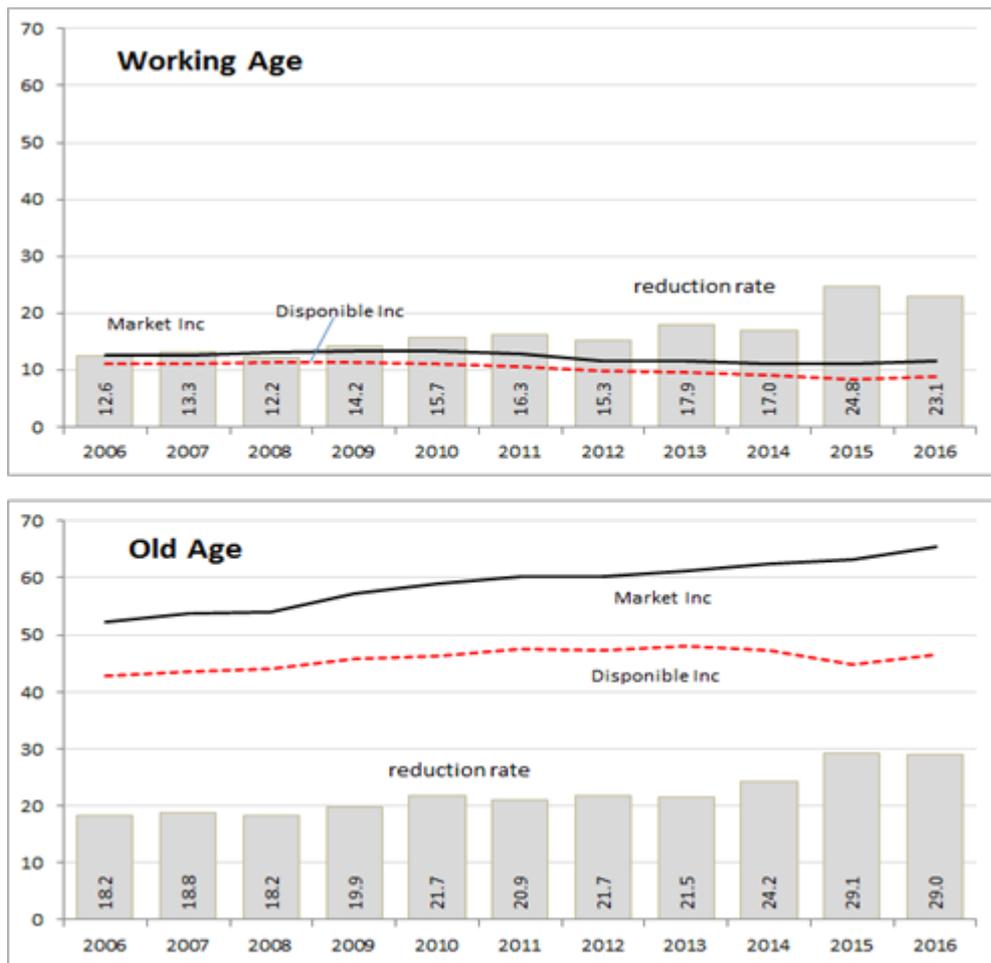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2인 이상 전체가구 대상 자료  
 2) 수치는 각 분위별 이전소득의 평균 금액(단위: 원)  
 자료: KOSIS,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위의 설명이 주로 소득계층의 분포와 추이,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소득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계층에 주목하였다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근로빈곤층과 노인빈곤층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노인빈곤층 규모는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그리고 그 수준 또한 정부의 각종 복지급여를 통해 더 이상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상황이다. 노인빈곤율의 높은 수치와 비교하면, 근로빈곤층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수치는 OECD국가들의 근로빈곤층 비율의 평균 값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규모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체 인구에서 근로연령인구가 차지하

는 비중이 크고, 이들이 아동과 노인 등 생활능력이 없는 집단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빈곤층은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의 이동이 크지 않지만, 근로빈곤층은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계층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특정시점에 포착되는 근로빈곤층 규모는 작지만, 실제 그 풀을 형성하는 인구집단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림 6] 근로연령층과 노인층의 소득유형별 빈곤율 추이와 빈곤감소율 추이(2006~2016)



주: 1) 분석대상은 전체가구

2) 빈곤율은 각 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측정

3) 빈곤감소율(reduction rate)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시장소득\*100

자료: KOSIS,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 3. 계층구조의 변화와 자산 그리고 교육

한국의 계층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산분포에 관한 부분이다. 물론 각종 서베이 데이터를 토대로 자산을 기준으로 한 계층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조사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각종 행정데이터를 토대로 자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아래 제시한 표는 수년전 시작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관련 데이터를 추출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한국사회의 소득과 재산은 교육수준과 연령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적 분명하게 위계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주에서 초등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 중학교 졸업자는 10%, 고등학교 졸업자는 35.4%,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39.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집단별 평균 연령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는 평균연령이 70.1세, 중학교 졸업 가구주는 61.3세,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는 51.7세, 대학교 이상 졸업 가구주는 45.8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과 평균연령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계적 질서가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채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의 경우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의 소득이 낮은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형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연령이 높은 가구주의 평균자산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표에 따르면, 그 역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연령이 높은 가구주의 평균 자산이 더 낮은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학력집단 내부의 자산이 매우 양극화된 형태일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향후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1>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평균소득, 자산, 부채

(단위: %, 세, 만원)

	전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 이상
가구주 분포	100	15.5	10	35.4	39.1
평균연령	53.2	70.1	61.3	51.7	45.8
경상소득	4,883	1,828	3,420	4,642	6,690
자 산	36,187	16,155	26,200	31,471	50,987
부 채	6,655	1,787	4,023	6,068	9,796
순자산	29,533	14,367	22,177	25,403	41,19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계층분포가 일정 정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계층분포와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상호는 소득상위 20%계층은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하위 20%계층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남상호, 2015). 아래 표는 2012년~2016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집단을 5분위로 구분한 뒤, 각 집단의 총자산의 평균 값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자산의 규모 또한 그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적 관계는 해당 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소득분위별 자산규모의 변화(2012~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 (만원)	전체	32,324	32,688	33,539	34,685	36,187
	소득1분위	9,840	10,034	10,951	11,908	12,036
	소득2분위	16,894	18,056	19,122	19,561	19,981
	소득3분위	23,556	24,422	25,294	26,944	28,100
	소득4분위	34,775	35,758	36,735	37,927	39,905
	소득5분위	76,545	75,153	75,573	77,073	80,911
5분위 자산배율 (배)		7.8	7.5	6.9	6.5	6.7

주: 1) 경상소득 기준 5분위

2) 균등화자산 = 소득분위별 평균자산/소득분위별 평균 가구원수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변화, 특히 계층지위의 대물림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정책적 관심은 청년실업자에게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실업자가 아니라 비학업. 미취업(NEET) 상태의 청년과 청년 근로빈곤층에게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지만, 비학업. 미취업 청년의 비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현실의 일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지표임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많은 고학력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기피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대한 규모의 취약계층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년 근로빈곤층 또한 주목할 대목이다. 많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일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임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은 비정규직 통계에 포착되지도 빈곤층으로 포착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이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파악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부모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보면 취약계층이지만 가구소득으로는 중산층에 포함되어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청년빈곤 문제가 표면화되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청년빈곤율이 어떤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 증가추세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다.

<표 3> 청년가구 형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 (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

	청년 1인 가구	청년 부부	청년부부와 자녀	부모동거 청년가구	기타 청년가구
2006	16.7	0.7	6.2	6.9	8.5
2007	12.6	0.4	4.7	6.4	11.6
2008	12.2	0.2	4.3	6.9	8.5
2009	18.5	4.0	3.8	7.7	9.0
2010	17.0	2.4	6.4	5.8	9.0
2011	12.9	2.1	6.4	4.9	8.4
2012	17.5	2.7	4.3	5.1	6.9
2013	15.1	1.8	4.3	4.8	7.9
2014	21.2	2.7	5.4	3.5	7.9
2015	19.5	-	3.1	4.3	8.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태진 외(2016) 132쪽에서 재인용

만일 청년 미취업자 규모가 크고, 청년 취업자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크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빈곤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계층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들의 성장기 가족의 소득지위가 이후의 이들의 취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이 표가 말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기존 빈곤연구에서의 기준과 다르다. 이 조사결과 보고서는 조사시점 취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계층, 이하를 저소득계층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서 결과를 해석하면, 저소득가구에서 자란 청년은 이후 취업과정에서 고소득계층 청년에 비해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은 낮고 미취업상태에 빠질 확률은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진입할 확률은 저소득층 56.6%와 고소득층 52.5%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여성에 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약 12%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소득계층별 청년 취업자의 유형 변화 추이(2007년과 2014년)

(단위 : %)

			2014년			
			대학(원)생	중소기업	대기업	미취업
2007년	전체	고소득층	1.3	52.5	34.7	11.5
		저소득층	1.2	56.6	16.0	26.3
	남성	고소득층	1.8	60.2	36.2	1.8
		저소득층	0.9	66.9	22.7	9.5
	여성	고소득층	0.3	37.8	32.0	29.8
		저소득층	1.4	49.8	11.6	37.2

주 : 8차 조사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2014년 청년패널조사 보고서

#### IV. 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 1. 선(先) 구조개혁 후(後) 복지확장 : 지켜지지 않는 약속

한 나라의 계층구조가 지속적으로 상향 이동하여 전체 인구의 80%-90%가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해당 집단 또한 그러한 인식을 갖는다면 매우 이상적일지 모른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가졌던 그리고 계속 꿈꾸는 이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계층구조가 그대로 고착되어 일정 규모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 내부에서 각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계층의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계층이동이 이미 주어진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이다. 이른바 신분제적 사회와 같이 계층이동이 봉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계층이동이 활발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전체 계층이동집단 중 상향 이동하는 집단보다 하향 이동하는 집단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큰 경우, 즉 빈곤층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그것은 빈곤과 박탈을 경험하는 인구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사회결속이 약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한국사회는 계층의 상향이동을 경험한 집단보다 하향이동을 경험한 집단의 비율이 높은 사회였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노인빈곤층은 지속적으로 빈곤층으로 유입되어 그곳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고, 근로빈곤층은 끊임없이 빈곤선을 넘나드는 반복빈곤의 양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흐름이 합쳐져 빈곤층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다. 앞서 빈곤문제는 빈곤층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근로빈곤층은 잠재적 빈곤위험 계층이 특정 시점의 근로빈곤층보다 훨씬 많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취해졌던 접근방식,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나 각종 개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그 성과를 실업자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 개혁을 하고 그 충격을 복지제도를 통해 흡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후의 정부 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는 등의 개혁조치는 취해졌으나, 정작 그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복지지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는 계층구조에서 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은 또는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던 셈이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복지수요의 증가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방식이다. 이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수요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하청을 확대하여 불안정 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사회에 전가해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거나, 복지제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 2. 사회보장제도의 진단 : 교육-노동-복지의 악순환 구조

한국사회에서 계층구조가 악화된 원인, 그리고 계층지위의 대물림이 악화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이 선순환 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정책이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복지제도가 시민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제도는 서로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기보다 기존의 역사적 발전경로를 따라 굴절된 상태로 영성하게 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먼저 교육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대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서열화 되어 있으며, 대학은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공급과잉 상태에 들어서 있다. 그리고 많은 대학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나 서구국가에 비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으며, 대학진학률도 매우 높다. 하지만 정작 기업의 노동수요와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 또한 신규인력을 훈련시키기보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신규취업자로 하여금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하는 이른바 스펙 쌓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방향보다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물론 정부에 따라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고용안정성을 희생한 상황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는 고용안정도 공정한 임금배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와 청년들로 하여금 취업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한 시그널을 준 셈이다. 가급적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을 피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발을 비정규직으로 내디디면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명확하게 심어준 것이다.

끝으로 1차 소득분배 과정에서 심화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의 고통을 감수한 보상 또는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개혁의 고통을 많이 받은 집단을 배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이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편논의에서 항상 가장 일차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문제였던 셈이다. 물론 정부가 복지확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 즉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고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증가하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이들에게 자원을 보다 고르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못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조치는 몇몇 정부에서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부조로 보호하기 힘든 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소득보장제도 및 서비스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노인과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성장과 탈산업화 그리고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육과 노동 그리고 복지영역에서의 정책적 실패 또는 정합성이 없는 정책조합 또한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빈곤의 대물림 또는 계층지위의 대물림은 이러한 정책조합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심화 및 사회결속의 약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 3.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모색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혁신을 요구받고 있지만, 시민들이 그러한 혁신을 감당하기에는 지난 20년의 시간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산업구조와 기업구조,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에 앞서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제도의 강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난 20년간 심화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의 분배과정에 대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왜곡된 관계를 개선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하청구조

와 비정규직의 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기업과 가맹점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상당한 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한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자영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통한 임금노동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다소 이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구조적인 변화는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한 각종 혁신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업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직업훈련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것은 평생교육과 보편교육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하에서 대학 중심의 교육체계에서 전문직업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업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개연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평생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업차원의 교육훈련 외에도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교육훈련체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과 높은 소득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이 상대적으로 잘 제공되지만, 정작 고용단절과 소득단절로 빈곤위험이 높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교육훈련은 실질적으로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편적 교육훈련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시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용단절과 소득단절 그리고 각종 경제사회적 위협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많은 일자리가 소멸되고 창출되는 과정에서 고용단절과 소득감소를 경험하는 집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성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통해 조세저항을 심화시키고, 예산제약을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방치하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간으로 하되 그것이 보호할 수 있는 집단과 정책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향후 빠르게 증가할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비

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 V. 맺으며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바꾸는 몇 가지 중요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발생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계층지위의 대물림이라는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 개혁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리 새로운 점이 없을지 모른다. 실제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의 정책성과가 실종되고 폄하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실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소득불평등과 계층지위의 대물림에 대한 시민들의 개혁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각종 선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장기간 고착화된 소득불평등과 계층지위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인 진단 그리고 해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교육과 노동 그리고 복지로 이어지는 사회정책의 세 가지 핵심 고리>를 개혁하는 일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사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많은 개혁과제는 세부실천방안은 물론이고 개편방향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 자체가 난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은 서둘러 도입해서 시행하더라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혁안은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서두를 일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착화된 계층구조, 패자부활이 힘든 시스템, 부와 직업이 대물림되는 문제 등은 사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이 교육의 정상화와 복지제도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불평등이 해소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운 사회서비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기퇴직을 줄여 자영업으로의 과잉진입을 막는 것, 이것이 다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일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연아. 정원오(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제50호
- 김영민. 강은영(2015),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산업관계연구』, 25(3), 2015년 9월,
- 김희삼(2015), “사회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통권54호
- 남상호 (2015), “소득분위별 소득·자산의 결합분포 분석”, 『보건·복지 Issue & Focus』
- 남준우(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층”, 『노동정책연구』, 7(4), 2007년 12월
- 노대명(2009), “계층이동과 탈락의 세습화 : 외환위기 10년 계층구조의 변화”, 『황해문화』, 제64호, 2009년 9월
- 민인식. 이경희(2017), “직업계층 이동성과 기회불균등 분석”, 『월간노동리뷰』, 2017년 7월호
- 박병영 외(2008),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 : 1943년~1955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락(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III) :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양정승(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35권 2호
- 양지연(2017),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7권 1호
- 여유진(2008),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 이경희(2017), “소득계층 이동성 실태와 동적 변화”, 『월간노동리뷰』, 2017년 6월호
- 이병훈(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 이왕원. 김문조. 최율(2016), “한국인의 상향이동에 대한 의식 : 연령(age), 기간(period), 코호트(cohort)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년 6월
- 이태진 외(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창규. 윤인진(2011), “세대 간 직업계층의 계승과 직업 지속성 간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14(2),
- 최은영(2012), “소득계층별 교육과 가구소득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20권 3호
- 한준(2016), “한국의 사회이동: 현황과 배경”, 『현상과인식』, 40(4), 2016년 12월
- 홍찬숙(2014), “계급론 대 개인화 이론?: 계급정치에서 (세계)시민정치로”, 『한국사회학』, 제48집 제2호

황덕순(2001), “도시취업자의 세대 간 직업이동과 세대 내 이동”, 『노동경제논집』, 24(2)

Causa, Orsetta and Åsa Johansson (2010),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Vol.2010/1.

Standing, Guy(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Blanden, Jo(2013), "Cross-country rankins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a comparison of approaches from economics and sociology", 『Journal of Economic Survey』, 27(1)